

‘새 길 새로운 세상’

**보도자료**  
2018. 3. 30.[금]

**국회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사당 511호, 전화: 02-784-3255, 팩스: 02-788-0270, 문의: 강민서비서  
홈페이지: <http://www.yajeong.or.kr>, 트위터: @ya\_jeong, 페이스북: /yajeong

## 유성엽 위원장,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

## 더 이상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을 수 있어”

- ‘후소샤’ 교과서로 시작해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까지 독도는 일본 땅으로 왜곡 교육
- 최근 도교에 독도 왜곡 상설전시관 설치 등 사회 전 방위적으로 잘못된 인식 주입
- 유 위원장, “항의 차원에서 국회 교문위원들 4월 중 독도 방문 추진할 것”

□ 30일,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정읍·고창, 민주평화당)이 고교 지도요령 개정을 통해 완성된 일본 정부의 ‘독도는 일본 땅’ 교육 의무화에 대해 지탄받아 마땅한 비교육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일본은 2001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후소샤’ 역사교과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왜곡 교육을 강화해 왔다. 비록 당시 이 교과서의 채택률은 미미하였지만, 아베 내각이 들어서면서 우경화 기조를 위해 독도에 대한 왜곡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아베 내각은 지난 2014년 교과서 검정기준을 ‘한국 중국 등 인접국가와 시각 차이를 보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역사 왜곡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그 후 작년 3월과 6월에는 각각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으며 일본이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편입하였다’는 내용의 왜곡 교육을 심화해왔으며, 이번에 고교지도요령을 개정함으로써 독도 왜곡 교육을 사실상 완성하였다.

- 뿐만 아니라 올해 1월에는 도쿄 한복판에 독도 관련 왜곡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영토·주권 전시관’을 개관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교과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독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주입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 이에 유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갈수록 심화되어 온 일본의 독도 왜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그러면서 “국회차원에서 일본의 왜곡 교육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우리 영토에 대한 확인의 의미를 담아 4월 중 국회 교문위원들과 함께 독도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지금이라도 일본의 역사 왜곡 교육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야 더 큰 갈등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첨부 1

### □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현황

○ (초기) 일본 우익계열에서 만든 ‘후소샤’ 역사교과서\* 등장('01년) 이후 교과서를 통한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 발생

\* (주요왜곡 내용)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 임나일본부설을 정설로 기재, 조선 침략은 억압받는 민족의 독립에 희망을 준 것임, 종군위안부 기록 삭제 등

- 단,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률은 0.039%로 일본 자국 내에서 영향이나 효과가 미미하였음

○ (심화) 제2차 아베신조 내각\*의 우경화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개정하는 교과서 검정기준 및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6년 만에 개정('14년)

\* (아베 신조 내각) 1차 : '06.9~'07.8, 2차 : '12.12~'14.12, 3차 : '14.12~현재

※ 학습지도요령해설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해설서에 해당(10년 주기 개정)

- (교과서 검정기준) 한국·중국 등 인접 국가와 시각 차이를 보이는 역사적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정 기준 개정

※ 「교과용도서검정기준」 개정은 근린제국조항(근린(이웃)아시아 국가 간 근·현대사 역사 사실 기술에 있어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배려 필요, 1982년)있음에도 사실상 폐기의 의미

#### <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 개정 · 고시 주요 내용 >

- 1) 특정 사항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할 것
- 2) 근현대 역사적 사상(事象) 가운데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숫자 등의 사항에 대해서 기술할 경우에는 통설적인 견해가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아동 또는 생도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없을 것
- 3) 각의(국무회의) 결정 그 외의 방법으로 표명된 정부의 통일된 견해 또는 최고 재판소(=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것에 의거한 기술이 되어 있을 것

- (학습지도요령해설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이 정당한 근거에 기반을 두어 편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개정

- (학습지도요령) 교육의 기본 방향과 교과서 집필 기준인 학습지도요령 개정

·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17.3),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17.6)

※ 학습지도요령에 처음으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 포함

·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18.3)

(출처 :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

## 첨부 2

### □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관련 일본 교육 변화

- 2008년 학습지도요령 해설 개정: 독도에 대한 교과서 기술이 증가되는 계기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북방영토와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 2014년 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 일부 개정: “독도와 센카쿠제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
    - 개정 전 고등학교 해설에는 영토문제에 대해서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라고만 언급되어 있었음.
  - 2017~18년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개정
    - “죽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
    - “영토의 획정 등을 다룰 것. 그 때에 북방영토를 거론하면서 함께 죽도, 센카쿠제도의 편입에 관해서 언급할 것”
- ※ 2008~18년까지 10년 동안 일본의 영토교육 강화.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으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기술된 교과서가 2020년부터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게 됨.